

1.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제도로 단일화골자 법개정안 국회제출

- 무농약 유기농산물 인증이 민간인증기관으로 단일화 되고 유기농자재 품질인증 제도도 공시 제도로 단일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제출된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공시의 표시 등(제42조)에 공시 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포장 등에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 번호, 유기농어업자재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로 개정된다.
- 또한 벌칙 3의2에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효능 효과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즉 현행 공시기준은 같되, 약효나 비효시험을 거쳐 효과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품질인증제품 경과조치와 자율보증의 신뢰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유기농업자재 표시기준 또 개정된다

- 법 개정 이전에 현행 공시기준을 개정하여 “유기농업자재 세부표시방법”이 신설된다. 고시 경과조치로 현행 라벨은 1년간 유효하므로 내년말까지 모두 바뀌어야 한다.
- 주요 개정 내용 (행정예고 9월중, 개정고시 11월중)
 - ① 표시사항은 한글로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고 용기나 포장의 뒷면에 전체면적의 5분의1 이상 차지하도록 표시 : 뒷면표시가 어려울 경우 별도 표기위치를 표시하고 여백에 표시
 - ② 표시사항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등 번호 : 공시 또는 품질인증/공시등 기관번호 /자재종류별 분류번호/일련번호로 표시
 - ③ 자재의 명칭 및 구분과 상표명 :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
 - ④ 제조장 주소 또는 수입원산지(국가, 제조사) : 국내 제조일 경우 제조장 주소, 수입 제품일 경우 원 제조사명과 원제조사의 국가명 표시
 - ⑤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 해당 유기농업자재 제조한 연월일을 표시하되, 수입제품의 경우 원 제조업체의 제조일자 표시
 - ⑥ 유통기간 : 제조일자를 기산일로 정하여 유통기간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표시

- 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다만 비료나 농약으로 등록된 제품은 반드시 표시해야 함)
- ⑦ 주성분의 종류, 함량 및 사용방법 :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
- ⑧ 보관 사용시 주의사항 : 제품을 보관 사용하는데 필요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되, 아주까리박을 사용한 자재는 동물 먹음을 방지할 수 있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
- ⑨ 원료의 종류 및 함량 : 공시(품질인증) 받은 각각의 원료명과 그 투입비율을 표시

3. 유기농업자재 부가세영세율 적용 추진경과

- **관련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기획재정부 소관)
 - 비료·농약·농기계는 등록되면 영세율 적용(법시행령 제3조)
 - 유기농업자재는 3종(목초액, 키토산, 천적)만 영세율 적용 (법시행령 제3조)
- 나머지 식물추출물 등 87종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 품질인증을 받아도 영세율 적용을 못 받고, 과세됨(친환경농업인이 부담하는 세액 연간 40억~50억원 추산)
 - 그동안 시판제품 일부만 문제되었으나 올 2월부터 농협 계통계약분까지 과세됨에 따라 친환경 농업인은 비료·농약을 사용하는 관행농업인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유기농자재를 구입하게 돼, 불만 토로 : 그 동안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영세율 미반영(기재부 2회, 농식품부 2, 농진청 1회 건의 : '13년 농진청에서 직접 기재부와 절충과정에서 담당사무관끼리 싸우는 바람에 더 늦어짐)
- 금년 4월 농식품부에서 1순위로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적용 확대안을 기재부에 제출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 미반영됨
-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적용 금후 추진계획
 - 각사가 친환경농민 동원 기재부에 건의문 1건 이상
 - 전문지에 연쇄 보도(농민신문 2.25/8.24일자, 농정신문(9.2일자, 영농자재신문(9.1일자)
 - 위 보도내용을 오려 국회에 9월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 박덕흠 의원에게 건의안 전달
 - 기획재정위 및 조세소위원회인 김광림 의원에게 건의안 전달
 - * 황주홍의원, 박맹부의원 및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에게 전달예정
- ♣ **농민신문 8.24일자기사 “유기농자재 영세율 확대를” 농민·친환경단체 지적 잇따라**
 - 목초액·키토산·천적 3종 불과 유기농현실과 맞지 않아 주재료 87종 부가세 면제돼야
- 유기농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민과 친환경농업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유기농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은 목초액·키토산·천적 등 3종에 불과하고, 농민들이 직접 구입해 자가 조제 등에 사용하는 유기농자재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농가부담이 크다는 것

- 현재 영세율 적용이 안 되는 품목은 버섯·해조류·클로렐라 등 식물추출물과 석고·규산염 등 천연광물, 동물성 오일, 구리, 유황, 왕겨 등 87종이다. 영세율이 적용안돼 친환경농민이 부담하는 세액은 연 40~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중략)
- 윤경환 한국유기농업협회장은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 가운데 대다수가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를 자가 조제해 사용하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영농자재 구입에 부가세를 면제받지 못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특례규정 제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다각도로 전달했다. 안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은 “유기농자재의 가격이 높으면 유기농실천농가들의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유기농산물 가격도 높아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가세 면세대상을 축소해야 하지만 농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는 게 기본 입장”이며 “다만 유기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꼭 필요하다면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4. 퇴비 등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 “퇴비 잔류농약검사 기준 비현실적” 농가 분노·부산물 처리때마다 수십만원 비용 부담, 퇴비공장도 원료조달 어려움...합리적기준 세워야”(농민신문 7.27일자 기사)
- 위 기사처럼 축사 약제소독 등으로 퇴비중 미량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문제시됨에 따라 농진청은 비료중 농약성분별 검출허용기준 설정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소비자 반응 등을 고려 농민, 소비자 단체와 협의회를 개최 의견수렴후 고시할 예정이다.

5. 유기농자재 잔류농약분석 320종에서 360종으로 갑자기 늘려 또 혼란

- 올초 잔류농약분석성분수를 320종으로 늘린지 7개월만에 360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또 농약이 아닌 효력을 높이는 보조제가 검출되어 말썽을 빚고 있다. 모 친환경농가가 유기농자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성분분석 의뢰한 친환경농산물에서 검출된 것이다.
- 여러 병해충관리용 천연물 유기자재를 사용하는데다 원료에서 검출된것인지 어떤 제품에서 검출된 것인지 몰라 해당농가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 애를 태우고 있다.
- 하루속히 해당자재 문제인지 중국산 원료 문제인지가 밝혀져 농가피해방지는 물론 360종 분석성분을 명확히 고시하고 농진청, 농관원, 3개인증기관간 분석 오차 눈높이를 맞추어서 또 다른 산업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 사안관련 전문지에 게재된 유기농자재잔류기준설정의 시급을 지적한 기사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기준 현실화 절실(8.11일자 영농자재신문)=

- **분석기관마다 결과치 달라 혼란 야기 정량한계치 '비현실적'...상향조정 필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는 A사는 자재 원료를 수입할 때마다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 분석기관 3곳 중 한 곳에 농약 잔류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1kg당 0.07ppm이 검출됐다고 통보받았다. 이에 A회사는 다른 분석기관 2곳에 다시 잔류검사를 의뢰했고 2곳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처럼 업계는 계속해서 비용 지출과 기준 해석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 정부는 유기농업자재 중 잔류농약 정량한계치를 1kg당 0.05ppm으로 설정해 2015년부터 검사에 적용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정량분석이 가능한 기술적 분석오차의 허용치를 의미할 뿐 잔류농약을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유기농업자재에서 농약 검출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가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 하지만 업계는 남극의 얼음에서도 농약이 검출되는 현 시대에서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자재가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더구나 해조류추출물은 천연적으로 지베렐린 등의 농약 성분이 함유돼 있어 0.05ppm 보다 더 많은 양이 검출될 수밖에 없다. "국내 여타 법률 규정을 보면 식품첨가물의 유해물질허용기준,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 및 사료검사기준의 유해물질 최소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며 "식품공전 중 식품첨가물 기준은 비의도적 유해물질 특성을 감안해 신축성을 두고 있고(1~10ppm) 사료중 농약, 유해물질기준은 비의도적 유해물질 특성을 감안해 1~1000ppm 로 설정하되, 허용오차를 평균 5%로 두고 판정시 이를 계산한 후 기준이상 또는 기준미달 시에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유기농업자재 중 비의도적 미량농약이 검출되어도 실제 농작물에 500~1000배로 희석 사용하므로 친환경 농산물중 농약잔류가 문제될 소지가 없다". 분석기술의 발달로 ppb 단위까지 검출이 가능해 진 상황에서 분석기관마다 검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
- 이에 업계는 잔류농약 검출기준을 공통으로 1ppm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퇴비와 4중복비 역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을 개정해 잔류 농약 정량한계치를 1kg당 0.05mg이하로 설정해 5월 26일부터 검사에 적용하고 있으나 유기농업자재와 같이 현실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인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은 "직접 먹지도 않고 작물에 희석해 사용하는 유기농자재의 경우 농약 등 불검출기준의 재정립이 요구된다"면서 "유기농자재 및 비료중 비의도적 농약 혼입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하는 한편 단계적 행정처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생물농약 유기농업에 못쓰다!? 기사 관련

- 다음은 영농자재신문 8.26자 기사의 요지이다 “친환경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최고자재, 정부·농업인·지자체 등 인식 전무, 공시제 활성화로 생물농약 하행길, 공시 못 받으면 유기농업에 못써...지자체 보조사업 대상자도 안돼...생물농약? 유기농업자재? 공시? 친환경? 용어도 많고 정책 담당자들도 자재 생산·공급·판매 업계도 사용자도 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 지침만으로도 문제 해결 가능하다”
- 생물농약은 2012년부터 천연식물보호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생물농약은 미생물농약과 생화학농약, 천적으로 구분된다. 생물농약은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자재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EU에서도 병해충관리용 목적은 생물농약으로 우선 등록되어야 한다. 등록비용도 병해충관리용 공시자재는 1500~3천만원인 반면 생물농약은 2~3억 이상 소요된다.
- 당연히 유기농에 사용가능하므로 중복해서 공시받을 필요도 없다. 관련 종사자나 당국자들이 공문으로 “유기농에 천연식물보호제는 사용가능하다”고 일선에 알려주면 해결될 단순사안이다.

7. 친환경농업 내년도 예산 4.1% 감소, 친환경농자재 예산도 줄어

-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예산(6759억원)이 올해(7045억원)보다 줄어 친환경 확대 의지를무색케 하고 있다. ◦전체예산 : ('16:7,045→'17:6,759억원, △4.1%)
- 친환경농업 생산·유통기반조성 : 친환경농업직불(437억원→411), 친환경농자재 (2,276억원→2,209) 등 친환경농업 생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속
- (유통)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10억원→48), 친환경농산물직거래 지원(414억원→294)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효율화 기반구축 : 18년 완공을 위한 연차별 소요 반영(사업기간 15~18년, 총사업비 180억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1,401억원→1,549),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16년부터 추진한 광역축산악취개선*(94억원→94) 사업을 지속 지원, 악취 발생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ICT 융합 축산악취 관리지원센터구축 (8.6억원) 신규지원, 산지생태축산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39억원→59.6)
- 초지조성을 위한 목초종자비 등 지원(22억원→26), 전기목책 등 기반시설 설치 (4→9억원), 농가 교육·홍보(신규, 3억원) 등
- 이와는 별도로 농기자재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하고, 수출업체 교육 등 지원(신규, 8.6억원),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 구축.

8. 농경연 “친환경농산물육성 직불제 개선, 친환경재배기술보급” 등 제안

-전년대비 유기인증 0.9%·무농약인증 12.4% 감소, 일·채소가공품 등 유기식품 수입 급증...1인당 친환경농산물 공급량 8.9kg으로 하향곡선...수요창출위한 정책제시-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올해 이후 증가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육성을 위한 직불제 개선을 비롯해 친환경과실류 위축에 대한 대책 마련과 친환경 재배기술 매뉴얼 작성·보급 및 수요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품목별 시장규모에서 과실류의 비중은 8%로 곡류(42%), 채소류(21%)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기후, 토양 등 과수를 재배하는 환경이 매우 불리해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농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수재배 기술 개발과 과실류 농가들의 유기나 무농약 재배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병해충관리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규모 확대에 대응한 친환경가공식품의 산업기반 확충과 국내외 소비시장 확대 등 유통 및 소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 '친환경 농업 보조금' 지급 횟수 제한 없앤다

- 친환경 농업을 실천함에 따라 발생하는 농업인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의원은 친환경 농업 보조금 지급 횟수 제한 폐지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황 의원은 "현행 친환경 농업 보조금은 지급 횟수 제한 등의 규정이 있어 친환경 농업인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농산물 품목별로 차등하여 친환경 농업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 "친환경 농업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면서 지급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환경보전 효과에 따라 농산물 품목별로 차등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농식품부 장관은 친환경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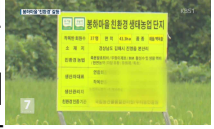
10. 경기도, 2016년도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 2018년까지 3년 동안 총 100억 원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경기도의 특화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보급해 친환경농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한경대학교 내에 연구동(6층), 연구온실 등을 조성한다. 전남대(08), 강원대(09), 경남 고성군(10), 경북대·제주대(12), 충북괴산군에 이어 7번째다.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 연구센터만 만든다고 친환경농업이 확산될는지 의문이다.

11. 봉하마을 '친환경 농업' 갈등?

-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귀향한 이후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친환경 생태농업이 시작됐는데, 최근 정부가 이곳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려고

하자 친환경 영농법인과 지주들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다. 친환경 영농법인인 봉하마을 측이 난개발을 우려하며 진흥지역 해제 보류를 요청한 것이다. 봉하마을 영농법인의 요청으로 해제가 보류되자, 지주농민들은 땅이 팔리지 않아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친환경만 하다보니까 농지매매가 안되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 작목반 회원들중 40% 농민들이 자신들의 논에 제초제를 뿌렸다. 단지는 회원의 20% 이상이 친환경농업을 포기할 경우 자동 취소되기 때문에 봉하마을을 대표하는 친환경 농업이 기로에 서게 됐다.



12. 국정 감사철을 맞아 “유박 파라치” 또 나선다

- 국정감사철이 다가오자 연례행사로 유박비료 파라치들이 또 수입유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에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만 보조사업에 참여케 함에 따라 좀 더 규모화된 유박업체가 이에 적응을 잘함에 따라 점유율이 높아 졌다. 올해 들어서도 유박유기질비료 점유율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더 열을 올려 모함하고 있으나 이를 문제삼는 것은 교역 세계화 추세와 시장논리에 반한다. 일례로 경기도의 T사의 가축분퇴비는 품질이 좋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있다. 따라서 품질을 더욱 좋게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에 맞는 영업전략을 구사한다면 다시 종전의 Ratio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 8.29일자 농수축산신문에 게재된 몇몇 업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외국에서 폐기하는 대두박 등을 수입해 정부 보조를 받고 국내 농경지에 공급하는 것은 국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외국의 폐기물을 원료로 한 유기질 비료의 점유율이 증가하면 국내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부숙유기질비료의 수요를 줄여 정부서 추진하는 자연 순환농업정책의 역행을 초래할 것”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대두박, 체종유박, 면실유박의 90% 이상이 사료로 수입되는 물질로 사실상 외국산 폐기물을 원료로 한 유기질비료에 정부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농정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
-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들 유박들은 인도 등에서 유박생산과 착유 목적으로 상업용으로 재배되며, 대두박은 비싸고, 면실박은 GMO로 유기농에 사용할 수 없다. 일본 등 30여개국에서 아주까리박 등을 수입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부숙유기질도 베트남 등에서 알 톱밥을 수입하고 있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주장이다. 종전 그린입상퇴비 규격 신설을 주장함이 옳다.
- 이같은 논란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질비료는 농업인의 사업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경축순환농업을 통한 자원재활용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수입 의존은 맞지 않지만 친환경 농가 등의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질소 등 무기성분이 높아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안 토론회]

♣ 유기농자재 부가세영세율등 현안협의회 개최(9.6, 15:30, 한친농)

[농정 소식]

1. '김영란법' 농업계 요구 끝내 외면

29일 정부 차관회의에서 시행령 가액기준 '3·5·10'으로 확정, 농업피해 현실화

- 정부는 2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농식품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 등이 가액기준 상향을 재차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데다 현재 가액기준이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을 감안 가액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것이다.



- 가액기준이 명시된 김영란법 시행령은 9월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면 김영란법은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관련업계와 정치권의 강력한 가액기준 상향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 농업계·수산업계·중소기업계 등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2. 올해 국정감사 9월26일~10월15일 개최한다

- 여야 3당은 올해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 이후인 9월26일~10월15일 열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9월1일 개회식 ▲9월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20~23일 대정부 질문 ▲ 9월26일~10월15일 국정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 청문회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9월5~7일 중 하루 열린다.

3. "농업인월급제 도입"법안 위성곤 의원발의


-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도입이 추진된다.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은 지난 28일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 위 의원은 "농업인의 주수입은 농작물을 실제 수확해 판매할 때 발생하며 재배기간이나 농한기에는 수입원이 없어 매달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의 대출비용은 농업인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에게 지역농협이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눠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4. 2016 바이코리안푸드(Buy Korean Food) 개최

-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aT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 수출상담회인 '2016 바이코리안푸드'(Buy Korean Food, 이하 BKF)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양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일본(23개사), 중화권(48), 동남아(26), 북미(29), 남미(3), 유럽(9), 중동(20), 인도(1), 남아공(1)이 참여한다
- 이번 BKF는 △1:1 수출 상담회, △중국·미국 식품안전법률 세미나, △알리바바 B2B 마켓플레이스 입점설명회, △수출 농식품 전시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8월 31일에는 해외식품바이어 160 여개사와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290여개사가 참가하여 1:1 수출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료, 농약 기타 농자재]

5. 2016 농협조합장 컨퍼런스“농자재 많이 팔면 구입단가 낮아져야

-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5일 열린 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세종권 2016 조합장 컨퍼런스에 참석한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 간 상생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조합장들은  “농자재 많이 팔면 구입단가 낮아져야 하며, 계통구매 보완이 필요하다”
- 조합장, 전문가 적재적소 배치가 중요 하다. 임직원들 교육 통해 전문성 키워야 한다. 대출규제·내부자금운용 완화가 필요하다. 벼 사후정산제 도입문제 등도 논의돼야 한다. 농산물 가공공장 경쟁력 제고위해 공영홈쇼핑에 상품 판매방안 등을 제시하고 토론 했다. 이날 지역 농·축협 조합장 400여명이 25일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기 위해 8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31일에는 강원·충북·제주·수도권, 9월8일에는 영남권을 대상으로 조합장 컨퍼런스가 열린다

6. 농협, ‘농자재사업 혁신협의회’ 구성 농자재사업 활성화

- 농협중앙회 자재부는 ‘2016 하반기자재사업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농자재 참여·혁신협의회’를 구성해 ‘2017년 품목별 구매제도 개선 방안’을 토론을 통해 결정할 방침임
 - 협의회는 9~10월 중 이뤄질 예정. 구성은 지역농협 실무자 40명, 계약 담당자 10명이며, 회의 목적 등에 따라 생산업체 관계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함
- 이처럼 농협이 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만드는 등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자재 산업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 현장 실무자의 참여를 통해 구매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사업 시스템의 결점을 보완하고 계통사업 참여도도 높인다는 복안이다(영농자재신문 8.22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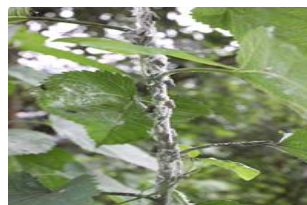
7. 일본농협, 한국산 남해화학 비료 수입한다

- 10월초 약 1000t 직송·보급 일본산보다 30~40% 저렴-일본농협(젠노(全農))이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산 남해화학 비료를 수입한다. 남해는 그동안 무역상사를 통해 일본에 간접 수출하였으나 이번에 일본 비료시장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는 젠노에 직접 수출체제를 갖췄다. 수출비종은 일본 농업시장 주력비종인 '14-14-14(질소-인산-加里)'남해는 지난 18일 여수항에서 1차 물량 1500톤(20kg기준 7만5000포)을 선적했다. 수출금액으로는 79만 달러다. 국내 요소가격은 1만1850원으로 일본산에 비해 59%, 21-17-17 복비는 1만3800원으로 35%에 불과하다.
- 일본 비료시장 점유율은 젠노 70%, 수입상사 30% 구조로 고결과 입도에 대한 품질규격이 엄격해 진입장벽이 높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 메리트가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농자재가격 인하를 위해 생산자재기본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JA전농은 비료 등 생산자재 가격인하 내용을 공시 중이다. 아울러 비료·농약·농업기계·포장재·사료 등 농산물 자재가격 인하를 위해 기술과 상품 개발을 병행하고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8. 외래 돌발병해충 확산 전국 공동방제

- 미국선녀벌레과 갈색날개매미충이 피해가 심각하다. 미국 선녀벌레는 경기, 충남, 경남을 중심으로 피해면적이 전국 8116ha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갈색날개매미충도 충남, 전북, 전남을 중심으로 전국 1만1276ha에서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1.6배 늘었다.
- 이번 공동방제는 성충의 산란시기에 맞춰 이달 18일~26일까지 1차 방제를 하고, 2차는 9월 5일~12일까지 실시한다. 한편 경기도내 농경지 6198ha에 걸쳐 나타나 가지를 고사시키거나 과일에 그을음을 발생시키고 결가지에 알을 슬어 생산량이 감소하고 과일의 상품성을 떨어트리는 등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도는 외래해충 미국선녀벌레 긴급 방제위해 12억원을 투입한다.



9. 미국산 과자에서 글리포세이트 농약 검출

- 식의약처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영맘스가 수입·유통한 미국산 곡류가공품 '웨이커 쿵 오츠' 제품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치(0.05mg/kg)를 초과하여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글리포세이트는 2015년 3월 WHO로부터 발암물질 2A등급을 받은 물질로, 몬산토

사의 대표적인 제초제 Round Up의 주성분이다. 2013년 미국 MIT공과대학 연구진은 이 물질이 체내에 쌓일 시 장 질환, 비만증, 당뇨병, 심장질환, 각종 암과 알츠하이머 병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0. 농약 안전관리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 최근 고독성 농약인 '메토밀 액제'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당 농약의 회수 및 폐기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에서는 8.21~9.13 (3주간)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www.epeopl.go.kr)을 실시하고있다. 정책토론결과 보고서 게재는 9월말이나 이미 강화 시행되고 있어 의미를 두기 어려운 사안이다.

11. 바이엘, 몬산토 인수합병 하나?

- 파이낸셜 타임스지에 의하면 최근 독일 바이엘사가 미국의 대표 종자업체인 몬산토를 인수합병하겠다고 하면서 620억 달러(한화 73조원)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합병액수와 더불어 농업과 화학분야에서 세계에서 이름난 업체 두 곳이 합쳐져 세계 최대 규모의 농화학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 세계 관련업계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전 세계의 식량과 의약공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바이엘 CEO인 베르너 바우만은 "몬산토의 GMO와 바이엘의 작물보호제가 합쳐지면 켐 차이나와 신젠타의 합병법인 매출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엘은 이번 합병을 통해 전 세계의 농화학시장에서 바이엘이 차지하는 비율을 32%까지 끌어올려 세계 최대의 기업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종자 및 작물보호제 회사를 만들기 위해 바이엘과 몬산토 CEO는 최근 몇 차례 회의를 갖고, 바이엘은 몬산토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완료, 최소 주당 130달러 이상을 제시해 곧 인수합병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2. 농식품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중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농식품 중소기업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의 농식품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에 신청, 선정되면 기술가치평가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총 30건의 기술에 대해 기술가치평가비용의 80%(한도 12백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등록특허, 출원중특허 및 품종보호권을 보유 기업은 www.fact.or.kr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수 있다.

[인사 동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aT사장 내정

농식품부 장관에 김재수(59) aT 사장이 내정됐다. 김재수 내정자는 30년 넘게 농업분야에서 공직생활을 거친 농정전문가로 통한다. 경북대 출신으로 행정고시 21회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정책과장, 농산물유통국장, 주미 대사관 농무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치고 농촌진흥청장과 농식품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2011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으로 임명 3년의 임기 후 다시 2년 연속 연임을 거듭했다. 9월1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농촌진흥청장에 정황근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

농촌진흥청장에 정황근(56) 전 농축산식품비서관이 내정됐다. 정황근 내정자는 1960년 충남 천안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등고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산정책과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혁신인사기획관, 대변인,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등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13년부터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실 농수산식품비서관을 맡아 왔다. 친환경농업과장을 3년이상 지내 친환경농업 전문가이기도 하다.



유기비료조합 새 이사장에 전이사장 수북농업 김종수 대표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지난 16년 2월 정기총회 실시한 이사장선거 무효 논란을 끝내고, 지난 25일 대전 유성 라온 컨벤션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이사장 재선거를 실시했다. 선거결과 김종수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선출됐다. 김 이사장은 농식품부 정부지원 퇴비예산증액, 비료 단속업무 농관원 이관저지, 부속도검사시정, 농협수수료 인하와 환경부 악취방지시설 등 환경시설보조금확보, 양분총량제 저지, EPR분담금 해결 등 산적한 문제해결에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내년도 유기질비료 예산이 줄어 드는 마당에 모두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신젠타코리아 한선호 사장 외부영입

2016년 9월 1일부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한선호 신임 사장은 글로벌 의료장비, 제약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인 (주)박스터에서 Baxter Gambro Renal Unit 사장을 역임했다. 이전에는 (주)동아제약 및 (주)기아인터트레이드에서 근무했다.



[알림]

농기자재 박람회(CAC) 참가 및 수출상담회 운영

- 2016. 11월초 CAC 참가신청 : 직접 중국 CAC 사이트에 하지 마시고 당 협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단, KINTEX와 지원방안마련)



□ 사업 개요

- 제 18회 중국 국제 농기자재 및 작물보호 박람회(CAC) 참가 매칭상담회 운영
- 일 시 : 2017. 2. 27 ~ 3. 3. 5일간 (박람회 기간 `17. 3. 1 ~ 3, 3일간)
- 참가규모 : 16개 부스 및 농산업체(친환경농자재 업체 위주)
- 장 소 : 중국 상해 신국제박람센터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
- 주요 사업

(세부 1) 對중국 수출전략 세미나 및 간담회 (2.28)

※ 유관기관 및 현지 코디네이터(社)를 통한 수출동향, 기술동향 및 수출지원 전략 공유

(세부 2) 농기자재박람회 참가 및 매칭상담회 운영 (3.1~3, Expo center)

※ 사업목표 : 바이어 상담 기업당 10건, 총 160건 추진

□ 예 산

- (사용내역) 장소 및 차량 임차, 물류 및 통관, 자료 제작 및 행사 운영 등
※ 농산업체 항공, 숙박, 식사는 기업 자부담
- 부스 사전 확보를 위한 '16년 8월 킨텍스에 부스 계약금 50%(\$24,300)를 지불 예정
※ 나머지 50%는 2017년 1월 지급 당일 환율에 따라 지불 예정

2. KIEMSTER 2016 국제농기자재 전시회

- 2016. 11. 2(수) ~ 2016. 11. 5(토)(4일간)
- 충남 천안시 천안삼거리공원
- 전시규모 : 50,000 m² 국내외 30만명 동원



※ 부스예약을 못하신 회원사는 주제품 1~2 종을 선정 협회관에 전시 하시기 바랍니다